탄의 전쟁
〈彈〉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1951년 4월 중순 밴 플리트 중장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다. 전선은 이미 교착상태였다.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어느 쪽도 완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얼마 뒤 정전회담이 시작됐다.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고지전(高地戰)이 치열해졌다. 국군·유엔군은 중공군 인해전술에 고전했다.

백선엽 1군단장의 SOS에 밴 플리트는 '무제한 포격'을 허가했다. 포병의 탄약 사용량을 규정치의 5배로 늘렸다. 정확히 관측한 목표에만 포격한다는 포병 원칙론에 구애받지 않았다. 미 의회가 세금 낭비라며 발끈했다. 밴 플리트가 그 눈치를 봤다면 휴전선은 지금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졌을 것이다. 종군기자들 사이에서 '밴 플리트 탄약량'이란 말이 나왔다.

AI와 드론전의 시대에 밴 플리트식 포격전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3일이면 키이우 함락"을 공언했다. 기갑 전력을 앞세운 기동전이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에 막히자 빠르게 태세 전환했다. 이후 전쟁은 동남부 1200㎞ 전선에 교착됐다. 장기 소모전에선 포병이 왕이다. 6·25 이후 최대의 포병전이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지게 된 경위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탄(彈)의 전쟁'이라 부른다.

우크라이나 야포는 350문, 하루에 2000~3000발을 쏜다. 매달 6만~7만 5000발이 필요하다. 전량을 나토에 의존한다. 미국의 월간 생산 능력은 3만 발, 나토 전체가 '영끌' 해도 나머지를 못 채운다. 탈냉전 후 이런 상황이 닥칠 줄 몰랐다. 서방을 통틀어 전시 탄약 수백만 발을 쟁여 놓고 연간 수십만 발을 찍어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작년 미국은 한국의 155㎜ 포탄 수십만 발을

포격전 된 러·우크라이나 전쟁
'70년 대치' 남북한이 탄약고
러·북 밀착에 비핵화는 더 요원
안보 직결된 문제 외면은 곤란

대여·구입했다. 이것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우고 재고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살상용 무기 수출에 부담이 큰 한국 사정을 감안했다. 한국의 탄약 우회 지원 이슈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러시아군 야포는 4000문, 하루 1만 발을 소모한다. 모든 군수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한 달 생산량은 25만 발 안팎이다. 기댈 곳은 야포 8800문, 방사포 5500문을 운용하는 북한밖에 없다.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이다. 전쟁 중인 나라의 정상이 '전시 내각'을 통째로 수도에서 수천㎞ 떨어진 극동으로 옮겨 김정은을 환대했다. 북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6700개가 넘는다. 152㎜ 포탄 기준 300만 발, 방사포탄 기준 50만 발이 실렸다.

작년 초 부촌이라는 개성에서 아사자가 쏟아졌다. 고강도 제재와 3년 코로나 봉쇄의 여파였다.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 김여정이 급파됐다. 러·우 전쟁은 천우신조였다. 포탄을 받은 러시아는 식량과 물자로 답례했다. 이걸 실어 나른 컨테이너가 9000개 이상 식별됐다. 두 차례 실패한 북 정찰위성이 3차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이다. 최근엔 대북 제재 위반을 15년간 감시해온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북한의 해결사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로씨야와의 관계"라는 김정은 말은 진심일 것이다.

70여 년 전 밴 플리트의 '무제한 포격'이 한창일 때 쾌재를 부른 건 일본이었다. 2차 대전 패망국에서 미군 병참기지로 신분을 세탁했다. 파산 위기의 군수 기업들은 대거 기사회생했다. 요시다 총리가 "이제 일본은 살았다"며 안도했다는 루머도 있다. 지금 김정은이 그런 심정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국제 왕따들의 결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분명한 건 7000㎞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 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냐"는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 무책임한 선동이기에 앞서 무식한 얘기다.

김준의 맛과 섬 [186]

당진 장고항 실치 밥상

국화도로 가는 배를 놓쳤다. 떠나버린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 배를 기다려야 한다. 두 시간을 벌었다. 잊고 있던 허기가 밀려왔다.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아침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장고항을 빠져나와 문을 연 식당을 기웃거리다 나의 할머니 같은 분이 앉아 계신 식당으로 들어갔다. 충남 당진 장고항리는 실치마을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 며느리가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80대 후반이 무색하게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으셨다.

"실치는 4월에 들어왔다가 5월이면 거짓말처럼 나가버려유. 지금 아니면 실치회는 맛볼 수 없어유. 그래서 축제도 하잖유." 실치회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아들이 돌미나리를 캐왔다며 실치회와 잘 어울린다고 했다. 할머니 권유로 실치국도 한 그릇 시켰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실치는 서산, 보령, 서천 일대에서 많이 잡혔다. 당시에는 무동력선 좌현과 우현 양쪽에 자루 그물을 달아 잡았다. 멍텅구리배라 불렀던 배다. 당시에는 조기나 새우도 같은 방법으로 잡았다. 조차가 큰 서해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어법으로 안강망으로 발전했다. 당시 잡았던 것은 실치가 아니라 뱅어였다. 실치는 흰배도라치 치어로 바다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뱅어는 연안에서 생활하다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가는 어류다. 석문방조제나 대호방조제 등 제방이 생기고, 서식지도 오염되면서 뱅어는 보기 어렵다. 그 자리를 실치가 차지했다.

지금은 장고항 앞바다에서 봄철에 가장 큰 실치 어장이 형성된다. 실치회 무침을 처음 팔기 시작한 곳도 장고항리다. 한때 10여 척의 배가 실치를 잡았지만, 20여 년 사이에 손으로 꼽을 만큼 줄었다. 실치 어획량도 줄었고, 많은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제 몇 집에서 개량 안강망으로 실치를 잡고 있다.

실치회 한 접시에 실치국까지 차려냈다. 국은 시금치와 잘 어울린다. 회무침은 먹다 남은 것은 따뜻한 밥에 비벼 먹는다. 이때 반드시 밥과 채소를 비빈 후 실치를 넣어 살살 비벼 먹어야 한다. 따뜻한 밥에 실치를 바로 올려 비비면 녹아버린다고 한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그동안의 국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보기 힘든 내용이었다. 이런 반응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나중에 발표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하지 않고 자신들만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원 사망 사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오만과 독선, 불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현안으로 부상하게 돼 있다. 회피하고 외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중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입장 발표의 내용이 소통 부족이었다는 비판을 듣게 됐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파행 사태에 대한 해법도 없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국회 절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대통령이 여전히 '내가 맞는다'고 우기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험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은 국민 지지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힘들다. 24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온다.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가시밭길을 헤쳐가려면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다"고 했다는데 진심이어야 한다. 총선에 지고도 바뀐 게 없다고 국민이 느끼면 국정은 불가능해진다.

K반도체 주력 생산 기지, 미국으로 옮겨갈 수도

미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미 정부가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에 이어 셋째로 많다. 삼성전자가 당초의 '170억달러 투자' 계획보다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10년간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한 보상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우리로선 K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설계부터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큰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73조원(527억달러)을 유인책으로 제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총 487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던 공언이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미국만 뛰는 게 아니다. 지난 3년간 미·중은 '1000일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경쟁을 펼쳤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에 맞서 중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범용 반도체로 눈 돌려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이후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착공하는 반도체 공장이 25곳인데, 같은 기간 중국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이 20곳에 달한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회생시키려 대만 TSMC와 손잡고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지자체·의회의 적극적 지원 덕분에 TSMC의 구마모토 1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불과 2년 만에 완공됐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1공장 건설에 4760억엔(약 4조2400억원)을 지원했고, 2공장 건설에도 최대 732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각변동의 중대한 시기에 주요국이 세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유치에 총력전이지만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반(反)기업 정서에 묶여 보조금 지급은 엄두도 못 낸다. 우리도 2043년까지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기업 투자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올 연말로 시효가 끝난다. 지자체들 훼방으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착공에만 3년이 걸릴 지경이다.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이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

정의 버리고 민주당과 야합했다가 몰락한 정의당

이번 총선에선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녹색당과 연합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에 17명의 후보를 냈지만, 심상정 대표 등 전원이 낙선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2.14% 득표에 그쳐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6석을 가진 원내 3당에서 '0석'의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의당 0석은 2012년 창당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고, 뿌리인 민주노동당의 2004년 10석까지 거슬러 가면 20년 만이다. 이번에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득표의 평균이 1%대에 머물면서 정당 보조금도 한 푼 못 받게 됐다. 국민에게서 퇴출 명령을 받은 것이나 같다.

정의당 몰락은 자초한 것이다. 2019년 위선과 반칙이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처음엔 반대 입장이다가 찬성으로 돌변했다. 알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신설과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맞바꾸는 야합을 한 것이었다. 누더기 선거제를 만들어놓고 심상정 대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다. 이에 청년층이 반발하자 병사 월급 인상으로 무마하려 했다. 정작 2020년 총선에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 때문에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의당 대표는 2021년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사퇴했다. 그런데 정의당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때는 당 차원에서 박원순 조문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성추행 가해자 옹호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때도 처음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가 정작 표결 때는 모두 찬성으로 돌변해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했다. 한때 소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적지 않은 지지를 받기도 했던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으니 몰락은 필연적이었다.

동영상 사설

'민심'은 하나 아니다, 구실로 쓰지마라

[제2 탄핵정변] 시동 거는가 … [탄핵 원죄 세력]들, '민심' 운운 [윤석열 힘 빼기] 착수

[촛불정변]도 [민심] 내세운 [사과] 요구로 시작
민심 절반은 생각 달라
이준석, 벌써 "탄핵" … 또, [바람잡이] 하려나
안철수, 또 [간보기] … [제2 유승민] 되려는가
이재명 만나는 건 잘못된 시그널 주는 것

[비좌파 언론]은 왜, 또, 바람잡나
거듭, 좌익의 [체제타도]에 부역?

[제2의 탄핵정변], 자유·보수·우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무르익고 있다. 또 한 번의 *[극좌 혁명]*의 시작이다.

*[체제타도]*를 위해 그들은 항상, *[내부 호응]* 세력을 필요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극좌 음모가들은 배후에서 봉기를 총 연출했다. 전투 1선에선 *[비(非) 좌파 언론]*과 *[바른미래당 계열]*이 *[돌격 앞으로]*를 했다. *[탄핵정변]*은 결국 *[극좌 + 비(非) 좌파 기회주의 정치인·언론 + 군중]*의 합작품이었다.

박근혜 탄핵 공범들이 또, 꿈틀댄다

철학자 **플라톤**은 경고했다. "민주정치는 *[대중의 선호]*가 도덕이 되는 *[중우정치]*로 변질할 수 있다."

〈외신기자협회장〉이었던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이렇게 바라봤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 아닌, *[야수가 된 민중]*이 지배한다."

이 *[선정적 민중주의]* 막장극이 4.10 총선 후 또 흉한 민낯을 드러냈다. 여·야를 막론한 *[윤석열 임기 단축론]* *[각종 특검 공세]*들이 그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 *"여당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 80%, 당 20%다."(김경률)*
국민의힘이 이겼더라면? *"공(功)은 윤석열 0%, 당 100%"*라고 했을 것이다.

★ *"거국·연립 내각을 짜야."*
이 말은 야당 지도자 **김대중** 이래의 *[대통령 힘 빼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만나야."*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보다,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을 만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말도 안 된다.

★ *"국힘은 유승민 이준석을 활용해야"*
대체 왜 그 상습 *[내부 총질꾼]*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띄워줄까? 탄핵파를 여당 주류로 만들고 싶어서? 자유민주 지지층의 대거 이반(離叛)을 바란다면, 그렇게 하라.

▲ 2023년 12월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면에 [괴뢰(남한) 전 지역에서 반미, 반전투쟁 전개, 제 68 차 촛불대행진 진행]이란 기사를 실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포착된 사진과 함께.

6선 의원이 된 그는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법무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그가 의장이 되면,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수장으로 다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제2의 탄핵정변]이 전개될 경우, 그가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정가에 나돌고 있다.

[박근혜 탄핵정변] 때도 북한노동당과 대남기구들은 [탄핵정변]을 부추기는 선전선동과 공작활동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 캡처/뉴시스

민심? 좌파 마음만 민심인가
히틀러 선택한 것도 민심이었다

이들 *[탄핵 세력]*은 *[모든 국가적 불행]*이 마치 **윤석열** 집권 후 처음 생긴 것처럼 왜곡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전후부터 이미 한국 정치·사회·교육·문화는 좌익 주도로 넘어갔다. 이 대세가 지난 40년 동안 **노무현·문재인**을 거치며 숱한 국가적 재앙들을 배설한 장본이다.

★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
★ *탈북 어부 강제북송* ★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 *부동산 정책 파탄* ★ *최저임금 인상*
★ *소득주도성장* ★ *세금 퍼주기*
★ *이재명 조국 송영길 사건*
★ *50억 클럽과 재판 거래* 등.

1475만 명 만 민심? 1317만 명 마음은?

이럼에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자 *[좌파 + 비(非) 좌파 탄핵 세력]*은 옳다구나 하고 신문으로 방송으로, 모든 *[나쁜 것]*들의 책임을 온통 **윤석열**에게만 씌운다. 그게 *[민심]*이라며.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심]*이 아니다. *[민심]*으로 위장한 가짜 뉴스다.

일어서라, 자유인들! 혼신의 투쟁으로 *[선정(煽情)적 민중주의]*란 프랑켄슈타인을 격멸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4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85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